

## 2025년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

- ◆ 2025년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의제가 담긴 USTR 연례보고서 발간
- ◆ 미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로 제조업 약화, 경제적 불균형, 국가안보 문제 제기
- ◆ 통상정책 키워드 : ▲생산 경제 ▲미국 우선주의 ▲무역 협정 재검토 ▲대중 전략

### I. 개요

#### □ 미 무역대표부(USTR), '2025년 통상정책의제 및 2024년 연례보고서' 발표

- USTR은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의제가 담긴 '2025 Trade Policy Agenda and 2024 Annual Report' 공개(3.3)
  - '74년 무역법 163조에 따라, USTR은 당해 대통령 통상정책 방향과 전년도 활동을 종합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, 미국의 무역 전략과 향후 정책 방향 제시
  - 보고서는 (1) 트럼프 대통령의 '25년 통상정책 의제(Trade Policy Agenda), (2) '24년 연례보고서(Annual Report), (3) WTO 30주년 의회 보고서(Assessment Report)로 구성
- 미국 통상정책의 도전 과제로 제조업 약화, 경제적 불균형, 국가안보 문제 제기
  -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 감소('93년 1,700만 개 → '16년 1,200만 개), 공장 폐쇄 증가('97~'16년 사이 10만 개 이상), 상품 무역 적자 증가(1조 달러 초과) 등의 문제 직면
  -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의 원인으로 글로벌 엘리트(globalist elites)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, 경제 및 국가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무역 재조정 의지 강조
- '25년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우선순위로 ▲생산 경제 지향 ▲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▲무역협정 검토 및 개정 ▲대중 전략 제시
  - 미국의 '25년 통상정책은 제조업 부흥, 중산층 소득 증가, 무역 적자 축소를 목표로 생산 증대, 고임금 일자리 창출, 공정한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 도모
  - 트럼프 신행정부는 보호무역에 기반한 '미국 우선주의' 정책을 강조하며,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공조와 공동 번영을 강조한 무역정책과 차별화 시도

## < 바이든 vs. 트럼프 무역정책 기초 >

	트럼프 (2025)	바이든 (2024)
기초	① 미국 제조업 복원·국가안보 최우선	①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
대중 전략	② 301조·관세 확대, PNTR 재검토	② 미-중 통상관계 재정립
무역 협정	③ 미국 우선주의 기반 양자 협정 추구	③ 교역 상대국 및 국제기구 협력 추구
산업 지원	④ 방위산업·전통 제조업 육성	④ 친환경 에너지·반도체 집중
통상	⑤ 전략적 관세·수출 통제 적극 활용	⑤ 포괄적·지속 가능한 통상정책 추진
WTO	⑥ WTO 체제 전면 개혁	⑥ WTO 체제 복원

[자료원] USTR 대통령 무역정책 아젠더(2024, 2025)

## II. 주요 내용

### ① 제조업 중심의 생산 경제(Production Economy)

- 미국 경제 구조를 소비 중심에서 생산 중심으로, 구조적 혁신을 통한 산업 재건
  - 현재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 감소, 무역적자 심화, 공급망 취약 등 경제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, 이는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
  - 미국은 단기 소비 중심에서 장기적으로 생산 중심 경제 전환을 목표로, 제조업 부흥을 통한 실질 중위소득 증대, 무역 적자 축소, 국가안보 강화 도모
  - 제조업이 타 산업보다 평균 10% 높은 임금 프리미엄을 갖는 점을 강조하며, 무역정책 개선을 통한 제조업 비중 확대와 고용 창출로 중산층 복원 목표 제시

### ② 미국 우선주의(America First) 통상정책

- 미국의 글로벌 경제 주도권 회복을 위한 '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' 시행 의지 강화
  - 보고서는 무역 적자가 미국의 부를 해외로 유출시키고, 기술적, 경제적, 군사적 우위를 약화시킨다고 지적,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정책의 우선적 추진 강조
  - USTR은 주요 교역국과의 경제 관계를 평가하여 비상호적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,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시행 의지 강화

-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, 'America First Trade Policy' 각서에 서명하며, 미국의 무역 적자를 야기한 불공정 무역관행과 대중국 견제 및 국가안보를 고려한 전방위적 조사 및 검토 지시

\* (불공정·불균형 무역 관련) ▲상품 무역 적자 원인 조사 및 관세 대안 등 제시, ▲반덤핑·상계관세 관련 정책·규정 검토, ▲교역국 환율 정책 평가, ▲역외 세금 관련 검토 등

\*\* (대중 경제·무역 관계 관련) ▲미·중 무역협정 관련 중국의 이행 여부 검토, ▲301조 4개년 검토 보고서 평가, ▲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부여 관련 법안 평가 등

\*\*\* 트럼프 대통령은 각 부처에 4.1일까지 구체적인 분야별 검토 및 권고안 제출 요구

### ③ 기존 무역 협정 재검토 및 개정

○ 미국은 무역 협정 재검토를 통해 비상호적 무역관행(non-reciprocal trade)을 시정하고, 자국 산업 보호 및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추진

- 미국은 국익 극대화와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을 위해 기존 협정을 재검토하며, 301조 조사 확대(기술 이전, 지적권, 디지털 서비스세 등), USMCA 재검토(원산지 규정 강화 및 노동·환경 기준 이행), 관세 체계 개편 등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방안 모색

### ④ 대중국 무역 관계 재정립

○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(기술 이전, 지적권 침해 등)에 적극 대응하고, 1단계 무역 합의(Phase One Agreement) 이행 여부 평가 및 추가 불공정 관행 식별

- (미·중 1단계 무역 합의 점검) '25년 6월까지 200개 이행 항목을 재평가하고 미달성 시 기존 관세 인상 외 추가 경제 제재, 수출 통제 등 강경 조치 검토

#### <20년 1월 체결된 미·중 1단계 무역 합의 개요>

○ (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 추가 구매) '17년 기준 대비 2년간 총 2,000억 달러 추가 구매, '20년, '21년 각각 2,279억 달러, 2,745억 달러를 목표로 설정

○ (지식재산권 보호 강화)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

○ (환율 투명성 개선) 시장 주도적 환율 정책 유지

○ (미국의 대중 관세 완화) 일부 관세 철회 또는 인하(15% → 7.5%로 하향 조정)

※ 중국의 합의 이행률은 약 57~58%로 추산(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)

- (PNTR 재검토) 미국은 '74년 무역법 402조에 근거해 강제노동 및 인권탄압 문제와 연계한 최혜국대우(MFN) 철회와 관세부과, 수입 제한 등 추가 제재 검토

## ⑤ WTO 개혁

- WTO의 설립 목표였던 개방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다자무역체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과 함께, 전면 개혁을 통한 신통상 질서 수립 의지 강조
- WTO의 구조적 한계로 ▲정책 방향성 상실, ▲협상 기능 약화, ▲비시장 관행 대응 미흡, ▲규범 이행 및 집행 취약, ▲개혁 추진 한계, ▲실질적 성과 부족 등을 지적
- 미국은 양자·다자 무역 협상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며, ▲불공정 무역 시정, ▲WTO 개혁 주도, ▲분쟁 해결 제도 개선 추진

## ⑥ '24년 한미 FTA 이행 점검 및 주요 협의 내용

- '2024년 무역협정 연례보고서'를 통해 한미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, 실무협의체를 통한 무역 현안 논의 언급
- ▲미국산 육류·가금류 수출, ▲한국산 유전자 변형(GE)제품 승인, ▲한국산 농약 허용 물질, ▲한국산 농산물 할당관세(TRQ), ▲클라우드 컴퓨팅 조달, ▲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 논의

### <연례보고서에서 언급된 한-미 양국 간 주요 안건 목록>

- (농업) 미국산 육류 및 가금류에 대한 잔류 기준 설정 문제 논의, (2) 한국의 농약 등록 요건 및 농업생명공학 제품 승인 절차 검토 등
- (노동) 한미 FTA 노동 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국제노동기구(ILO) 협력 방안 논의
- (섬유) 역외산 원사 사용 구리암모늄레이온 직물의 무관세 혜택 원산지 기준 개정안 발효
- (환경) ▲기후변화 대응, ▲불법·비보고·비규제(IUU) 어업 근절, ▲WTO 수산보조금 협상, ▲플라스틱 오염 등 한미 FTA 환경 챕터 이행 현황 점검

### Ⅲ. 현지 반응

-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무역체제 재검토와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 예고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 및 무역 분쟁 심화 가능성 제기
- 연방준비제도(FED)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4.25~4.5%로 동결하고, 경제 상황을 면밀히 주시
  - FED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.1%에서 1.7%로 하향 조정하고, 실업률 전망치는 4.3%에서 4.4%로 상향 조정
  -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단기적일 경우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으나, 무역전쟁 장기화 시 물가 안정을 고려한 고금리 유지 가능성 시사
- 하인리히 재단(Hinrich Foundation)은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 '미국 우선주의' 무역정책이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며, 세계 경제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
  - 무역법 제232조, 제301조, 국제비상경제수권법(IEEPA)을 활용한 미국의 일방적 조치가 보복관세 유발·WTO 기능을 약화시켜 글로벌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경고
  -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행정명령 변경과 정책 혼선이 기업의 장기 전략 수립을 저해하고, 주요 교역국의 정치·경제적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
  - 관세 인상과 기업 운영비 증가로 소비재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, 이는 소비자 신뢰도 하락과 시장 변동성 확대를 초래하여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

[자료원] USTR '2025년 통상정책의제 및 2024년 연례보고서',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, 하인리히 재단, 블룸버그 및 KOTRA 워싱턴DC 무역관 보유자료 /끝/